地理學論叢 第28號(1996. 8), 75-94

日帝時代 末期 都市化, 工業化에 대한 農村 住民들의 適應 過程에 관한 硏究

- 1935년~1945年을 中心으로 -*

이기봉**

< 차 례 >

I. 서론
II. 일제 말기 도시화, 공업화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적응 과정
1. 농민의 계층적 분해 경향
2. 식민지공업화의 전개에 의한 지역 격차의 심화
1) 도농 격차의 심화
2) 도별 격차의 심화
3. 농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1) 도시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상대적 감소
2) 이동인구와 연령과의 관계
3) 이동인구와 학력과의 관계
4) 이동인구와 계층과의 관계
4.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의 직업 전환
1) 한국인 직업별 호수의 변화
2) 한국인 직업별 남자 主業者수의 변화
3) 직업 전환과 연령과의 관계
4) 직업 전환과 학력과의 관계
III. 결론

主要語 : 도시화, 산업화, 농촌주민, 대응과정, 압출요인, 흡입요인

I. 서론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는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제학문분야에서 그 원인을 규명해 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1960년대 이전 한국인의 역사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서는 역사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이 1960년대 이후의 변화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이전부터 키워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한국인이 언제부터 키워왔는가에 대한 시각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196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던 주체의 하나인 양질의 노동자를 공급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도시화,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도시화, 산업화에 대한 대응과정의 연구는 이후 한국역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 시기에 농촌주민들이 과도기를 겪었다고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다시말해 1930년대 중반부터 해방이 되기까지의 시기에 과도적 혼란기를 겪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제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1935-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농촌주민들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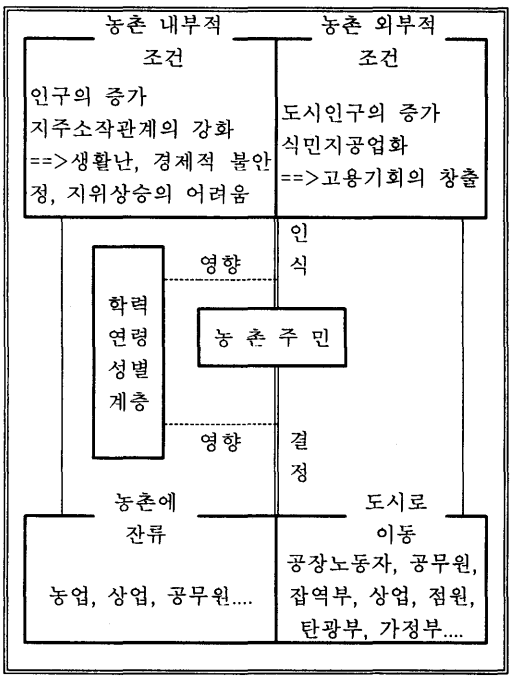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이정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첫째, 193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 공업화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아본다.

둘째,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으며, 그러한 대응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농촌주민들을 '일제 식민지권력과 지주계급에 수탈받고 저항하는 존재'로서보다는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속에서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 부각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환경변화를 중요시할 것이며, 그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농촌주민들이 생존 혹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구명하고자 한다.



〈그림 1〉 농촌주민들의 적응 메카니즘

Ⅱ. 일제 말기 도시화, 공업화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적응 과정

1. 농민의 계층적 분해 경향

일제시대와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1950년까지 농촌지역을 규정한 경제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주소작관계였다. 이렇게 지주제도가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확고한 기본적 제도가 된 것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때문이었다. 일제시대에 일제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농민들로부터 점유권과 경작권을 박탈하여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鄭德基·崔樘默, 1979).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민의 계층 분해가 급격히 발생하였으며, 지주소작관계는 강화되었다.

<표 1>을 보면 1930년대 초반까지 自作農, 自小作農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소작농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小作겸火田民, 純火田民 등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농민계층의 몰락적 분해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계층의 몰락적 분해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강화된 지주소작관계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미진한 곳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930년대 초반까지 총농가호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몰락한 농민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상태에서 지주소작관계의 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면, 몰락한 농민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강화된 지주소작관계하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총농가호수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표 1>을 보면 총농가호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자작농, 자소작농의 수도 눈에 띄는 감소를 보이고 있지 않다. 거기다가 소작농, 농업노동자, 순화전민의 증가경향도 이전에 비하여 매우 둔화되었거나, 정체, 감소하기도 하였다. 아직도 농민의 계층적 분해

〈표 1〉 전국 영농 형태별 농업 호수의 변화(1916-1942)

(단위: 戶)

	지주 (갑)	지주 (을)	자작	자작겸 소작	소작	피용자	겸 화전	순 화전	합계
1916	16,079	50,312	530,195	1,073,360	971,208				2,641,154
1917	15,485	57,713	517,996	1,061,438	989,362				2,641,994
1918	15,731	65,810	523,332	1,043,386	1,003,775				2,652,484
1919	16,274	74,112	525,830	1,045,606	1,003,003				2,664,825
1920	15,565	75,365	529,177	1,017,780	1,082,842				2,720,729
1921	17,002	80,103	533,188	994,976	1,091,680				2,716,949
1922	17,157	81,926	534,907	971,877	1,106,598				2,712,465
1923	17,904	82,498	527,494	951,667	1,123,275				2,702,838
1924	18,663	83,520	525,689	934,208	1,142,192				2,704,272
1925	19,735	83,832	544,536	910,178	1,184,422				2,742,703
1926	20,571	84,043	525,747	895,721	1,193,099		59,683	34,316	2,753,497
1927	20,737	84,359	519,389	909,843	1,217,889		90,558	29,131	2,781,348
1928	20,777	83,824	510,983	894,381	1,255,954		94,485	33,269	2,799,188
1929	21,326	83,170	507,384	885,594	1,283,471		92,710	34,332	2,815,277
1930	21,400	82,604	504,009	890,291	1,334,139			37,514	2,869,957
1931	23,013	81,691	488,579	853,770	1,393,424			41,212	2,881,689
1932	32,890	71,933	476,351	742,961	1,546,456			60,497	2,931,088
1933			545,502	724,741	1,563,056	93,984		82,277	3,009,560
1934			542,637	721,661	1,564,294	103,225		81,287	3,013,104
1935			547,929	738,876	1,591,441	111,771		76,472	3,066,489
1936			546,337	737,849	1,583,622	116,968		74,727	3,059,503
1937			549,585	737,782	1,581,428	117,041		72,919	3,058,755
1938			552,430	729,320	1,583,435	116,020		71,187	3,052,392
1939			539,629	719,232	1,583,358	111,634		69,280	3,023,133
1940			550,877	711,370	1,616,703	101,606		65,990	3,046,546
1941			548,274	723,345	1,647,388	92,654		59,339	3,071,000
1942			529,717	729,431	1,641,702	95,778		56,818	3,053,446

출전: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5, 1934, 1942)

주: ① 지주(갑)은 모든 토지를 소작으로 주고 스스로는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지주(을)은 일부는 스스로 경작하고, 나머지를 소작으로 주는 경우

주: ② 1933년부터는 지주(을)이 자작에 포함되어 계산되었고, 지주(갑)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러한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비록 일본독점자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공업화이긴 하지만, 그것은 한국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한국사회 전체가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결국 1930년대 이후의 이러한 도시화, 공업화의 영향 때문에 농민계층분해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도시화, 공업화가 많은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직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농민의 계층분해경향을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시대 전기간 동안 농민계층분해의 경향을 지주소작관계의 강화, 일제의 수탈 등과 같은 요인들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본다. 주변환경의 변화를 도외시 한 채 농촌 내부만의 문제로서 농민계층분해의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의 농촌 내부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주변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식민지공업화의 전개에 의한 지역 격차의 심화

1930년대 이후 급격히 전개되기 시작한 식민지공업화에 대하여, 그 주체가 일제와 일본독점자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植民地工業飛地論', '民族經濟論', '二重經濟論', '植民地近代化論'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왔으며, 현재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공업화가 일본 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식민지공업화의 근본목적이 한국인의 착취를 통한 세계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만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식민지공업화에 의한 변화가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농촌지역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1) 도농 격차의 심화

1930년대의 식민지공업화는 都農간에 차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것은 식민지공업화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도농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자.

도농간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우선 府郡別 직접세 부담액의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농간 격차의 변화를 알아본다. 직접세 부담액이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직접세의 내용이 府郡間에 府稅와 邑面稅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모두 같기 때문에 도농간의 경제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1인당 직접세부담액의 변화경향을 <표 2>를 통하여 알아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府郡 모두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38년에서 1942년간의 1인당 증가액의 폭이 매우 크다. 하지만 그 증가율에서는 1938년을 100으로 놓는다면, 1942년에 府는 240, 郡은 160이 되어 府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

〈표 2〉 府郡 직접세 부담액의 변화(1926-1942)

(단위: 円)

			1926	1930	1934	1938	1940
전체	부	총액	6,626,533	9,072,808	12,317,098	25,725,414	102,815,908
		인구	840,803	1,118,410	1,313,561	2,211,194	3,690,624
		1인당	7.881	8.112	9.376	11.63	27.86
	군	총액	45,746,214	50,510,059	54,661,349	67,201,958	119,704,723
		인구	18,263,097	19,138,153	19,812,266	20,422,557	22,670,777
		1인당	2.505	2.638	2.753	3.29	5.28
일본인	부	총액	4,467,587	6,471,580	8,634,038	14,079,018	55,704,693
		인구	227,779	263,378	288,235	362,660	459,628
		1인당	19.613	24.571	29.954	38.83	121.19
	군	총액	5,067,809	6,327,607	8,639,395	10,036,487	20,478,026
		인구	214,547	238,489	273,149	270,660	293,195
		1인당	23.620	28.628	31.628	37.08	69.85
조선인	부	총액	1,622,281	2,158,551	3,459,314	11,376,435	45,727,237
		인구	596,610	829,875	1,005,757	1,831,000	3,195,353
		1인당	2.719	2.601	3.439	6.21	14.31
	군	총액	40,555,011	43,453,119	45,571,380	56,994,883	98,512,966
		인구	18,018,423	18,855,712	19,508,047	20,119,616	22,330,056
		1인당	2.250	2.304	2.336	2.83	4.41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34,1940)

주: 일본인, 조선인 이외의 외국인도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다

나고 있다.

일본인만을 보면 1938년까지 1인당 직접세 부담액이 府郡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42년에 와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1938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1942년에 府는 312, 郡은 188이 되어 府가 훨씬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선인을 보면 일본인과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은 1938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부는 이미 1934년부터 증가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1938년 이후 府郡 모두 증가율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의 크기에 있어서는 1938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1942년에 부는 230, 군은 156으로 부가 훨씬 큰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1930년을 100으로 놓으면 1942년에 부는 550, 군은 191이 되어 증가율에 있어서 府郡間에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府郡間 1인당 직접세부담액의 비율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府郡間 1인당 직접세 부담액의 차이는 1934년부터 커지기 시작하여 1938년에는 3.5배, 1942년에는 5.3배에 달하게 되며, 그 변화폭은 1938년에서 1942년에 가장 크다. 다음으로 일본인을 보면 1934년까지는 군이 부보다 약간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8년에 와서는 부가 군보다 더 많아졌으며, 1942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조선인은 1930년까지는 부가 조금 많다가, 1934년에 1.5배, 1938년에는 2.2배, 1942년에는 3.2배가 되어 그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 府郡間 1인당 직접세 부담액 비율의 변화 경향(1926-1942)

		1926	1930	1934	1938	1942
비율 (府/郡)	전체	3.1	3.1	3.4	3.5	5.3
	일본인	0.8	0.9	0.9	1.1	1.7
	조선인	1.2	1.1	1.5	2.2	3.2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34, 1940)에서 재작성

이상의 경향을 종합해 보면, 193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전체적으로도 각 민족별로도 도농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폭에 있어서는 조선인의 변화폭이 일본인의 변화폭보다 훨씬 더 컸다.

2) 도별 격차의 심화

〈표 4〉 도별 제3종 소득액의 변화(1934-1942)

(단위: 인구-천명, 소득-천원)

	1934			1942			
	인구	총소득	일인당 소득(1)	인구	총소득	일인당 소득(2)	(1)/(2)
경기도	2,224	85,604	38.5	3,224	289,584	89.8	2.33
충청북도	884	6,645	7.5	980	19,095	19.5	2.60
충청남도	1,420	14,886	10.5	1,668	39,248	23.5	2.24
전라북도	1,474	18,723	12.7	1,721	54,101	31.4	2.47
전라남도	2,321	22,240	9.6	2,818	74,730	26.5	2.76
경상북도	2,370	23,294	9.8	2,635	83,989	31.1	3.17
경상남도	2,134	30,536	14.3	2,470	116,922	47.3	3.30
황해도	1,549	15,517	10.0	1,956	59,612	30.0	3.00
평안남도	1,373	19,916	14.5	1,841	93,752	50.9	3.51
평안북도	1,577	12,692	8.0	1,896	72,053	38.0	4.75
강원도	1,457	8,041	5.5	1,866	32,090	17.6	3.20
함경남도	1,565	15,483	9.9	2,055	88,240	42.9	4.33
함경북도	772	12,563	16.3	1,231	84,589	68.7	4.21
합계	21,126	286,142	13.5	26,361	1,10,7816	42.0	3.11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2)

식민지공업화는 都農 격차뿐만 아니라 道別 격차도 심화시켰다. 이는 식민지공업화가 도별로 차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표 4>는 1934년부터 1942년까지의 도별 소득 격차를 보여준다.

1934년의 도별 1인당 소득액을 보면 벌써 도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를 보면 전국의 1인당 소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경기가 28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함북이 121, 평남이 107, 경남이 106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도들로 나타나 있다. 전북, 전남, 황해, 함남, 경북이 앞의 도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도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북, 충북, 강원은 극히 낮은 도들을 이루고 있다.

〈표 5〉 1인당소득액의 도별 비교(1934-1942)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34	285	56	78	94	71	73	106
1942	214	46	56	75	63	74	113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전국
1934	74	107	59	41	73	121	100
1942	71	121	90	42	102	164	100

주: 전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임

1942년에 오면 전국의 1인당소득을 100으로 했을 경우, 1934년에 비해 경기의 소득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214로 아직도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고, 함북 164, 평남 121, 경남 113으로 1934년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함남 102, 평북 90으로 전북, 전남, 황해, 경북을 제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도들로 출현했다. 전북, 경북, 황해, 전남, 충남은 앞의 도들과 일정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계속 이어져 있으며, 충북과 강원이 가장 소득이 낮은 도들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도별 소득격차가 인구의 도별이동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도별 소득격차가 나타난 이유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식민지공업화의 차별적 진행 때문이므로 인구의 도별이동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 이후 진행된 식민지공업화에 의해 광공업 생산액 뿐만 아니라 총생산, 총소비, 총소득, 총독부의 수입·지출 등 모든 부문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가 일제의 '전쟁준비'와 '일본을 위한 조선의 생산기지화'라는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증가만을 보고 한국인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인이 주도했을 경우보다 강도가 작기는 했지만 한국 농촌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은 분명하며, 그 충격에 의해 농촌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공업화의 전개과정속에서 都農間·地域間 격차가 심화됨으로 인하여 우선 인구의 이동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3절에서는 그러한 인구이동의 정도와 성격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

〈표 6〉 전국 府邑인구의 변화(1925-1942)

	인구(명)			연평균증가인구(명)			
	부(21개)	읍(54개)	합계(75개)	기간	부	읍	합계
1925	1,078,896 (100)	729,861 (100)	1,808,758 (100)				
1930	1,415,731 (131)	895,984 (123)	2,311,715 (128)	1325-1930	67,371	33,225	100,591
1935	1,747,024 (162)	1,073,474 (147)	2,820,497 (156)	1930-1935	66,257	35,498	101,756
1942	3,690,624 (342)	1,711,658 (235)	5,402,282 (299)	1942-1935	277,657	91,169	368,826

출전: 朝鮮國稅調査報告(1925-1935),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2)

〈표 7〉 府邑인구와 非府邑인구의 연도별 변화(1925-1942)

(단위: 명)

	부읍		비부읍		총인구	
	인구	증가수	인구	증가수	인구	증가수
1925	1,808,758		17,714,187		19,522,945	
1930	2,311,715	502,957	18,546,590	832,403	21,058,305	1,535,360
1935	2,820,497	508,782	20,078,541	1,531,951	22,899,038	1,840,733
1942	5,402,282	2,581,785	20,959,119	880,578	26,361,401	3,462,363

출전: 朝鮮國稅調査報告(1942),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5-1935)

다.

1) 도시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상대적 감소

<표 6>은 1942년 현재 인구 2만이상 부읍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1942년 이전의 행정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부읍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1935년에서 1942년 사이다. 부읍 합계를 보면 1935년 이전에는 연평균 10만명 정도 증가하다가 1935년에서 1942년 사이에는 연평균 368,826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읍을 따로 계산하면 부인구는 1935년 이전까지 연평균 6만여명, 읍인구는 3만여명 증가하던 것이 1935년에서 1942년 사이에는 각각 연평균 277,657명, 91,169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30년대 이후 도시의 인구증가가 일부 大都市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작은 中小都市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인구의 증가가 농촌지역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표 7>을 통하여 알아보자.

<표 7>을 보면 비부읍인구가 1935년과 1942년 기간에 있어서 그 증가수가 그 이전보다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다. 또 이 기간에 증가한 총인구 중에서 부읍의 증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부읍지역에 증가된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부터 離村한 인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총인구의 증가지수를 1925년의 非府邑 인구에 곱한 非府邑 인구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자.

<표 8>은 해외로 이동한 인구를 제외한 것이

〈표 8〉 비부읍 실제총인구와 계산총인구의 변화(1925-1942)

(단위: 명)

	총인구 증가지수	비부읍		
		실제인구	계산인구	차이
1925	1.000	17,714,187	17,714,187	0
1930	1.079	18,546,590	19,107,299	-560,709
1935	1.173	20,078,541	20,777,492	-698,951
1942	1.350	20,959,119	23,919,075	-2,959,956

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농촌지역의 인구이동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8>을 보면 농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1935년에서 1942년 사이에 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부읍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부읍지역의 증가된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부터 離村한 인구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결국 농촌주민들은 도시화, 공업화속에서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거나,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농업중심의 생활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도시화, 공업화에 적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이동인구와 연령의 관계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인구와 연령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 부분을 밝혀내면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이촌현상이 농촌의 압출요인보다는 도시의 흡입요인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표 9〉 1944년 도별 조선인 남자의 연령별 인구

(단위: 명)

	15세이하	16-25	26-35	36-45	46이상	합계
경기	461,665	243.000	200,153	139,309	213,352	1,257,479
	(36.7)	(19.3)	(15.9)	(11.1)	(17.0)	(100.0)
충북	183,219	62,727	58,512	47,303	82,554	434,315
	(42.2)	(14.4)	(13.5)	(10.9)	(19.0)	(100.0)
충남	301,347	105,899	96,455]	79,287	132,476	715,464
	(42.1)	(14.8)	(13.5)	(11.1)	(18.5)	(100.0)
전북	296,995	108,127	94,061	81,356	131,922	712,412
	(41.7)	(15.2)	(13.2)	(11.4)	(18.5)	(100.0)
전남	492,715	179,137	138,059	129,144	231,004	1,170,059
	(42.1)	(15.3)	(11.8)	(11.0)	(19.7)	(100.0)
경북	470,134	178,086	140,088	118,277	215,126	1,121,711
	(39.3)	(15.9)	(12.5)	(10.5)	(19.2)	(100.0)
경남	394,097	174,837	125,717	112,256	196,230	1,003,117
	(39.3)	(17.4)	(12.5)	(11.2)	(19.6)	(100.0)
황해	320,619	149,064	130,593	86,078	153,007	839,361
	(38.2)	(17.8)	(15.6)	(10.3)	(18.2)	(100.0)
평남	290,755	155,998	117,486	84,838	128,291	779,368
	(37.3)	(20.0)	(15.3)	(10.9)	(16.5)	(100.0)
평북	292,766	150,365	117,175	90,210	139,055	789,571
	(37.1)	(19.0)	(14.8)	(11.4)	(17.6)	(100.0)
강원	322,848	139,159	126,336	92,843	153,408	834,594
	(38.7)	(16.7)	(15.1)	(11.1)	(18.4)	(100.0)
함남	304,716	173,379	135,989	951,529	143,031	852,267
	(35.8)	(20.3)	(16.0)	(11.2)	(16.8)	(100.0)
함북	150,479	105,647	83,995	53,740	71,795	465,656
	(32.3)	(22.7)	(18.0)	(11.5)	(15.5)	(100.0)
합계	4,282,337	1,925,425	1,566,619	1,209,793	1,991,251	10,975,376
	(39.0)	(17.5)	(14.3)	(11.0)	(18.1)	(100.0)

출전: 朝鮮國稅調査報告(1944)

주: ( )안은 %임

이동인구의 경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변화를 포착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공업화, 도시화는 농촌지역의 중장년층보다 젊은 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령이 많은 층은 기존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인구의 변화와 연령층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당시 부읍지역의 연령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를 않아 도별 연령분포를 통하여 유추해 보고자 한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도별로 차별적인 진행을 보였기 때문에 인구의 도별 이동이 심했으며, 이러한 도별 이동이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이었으므로 도별연령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동인구의 연령적 특징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고 본다.

<표 9>는 도별 연령분포중에서도 남자만의 도별 연령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6에서 25세까지의 인구는 함북 22.7%, 함남 20.3%, 평남 20.0%, 경기 19.3%로서 전국 평균 17.5%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충북 14.4%, 충남 14.8%, 전북 15.2%, 전남 15.3%, 경북 15.9%로서 전국 평균 17.5%보다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평북, 황해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고, 경남, 강원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다.

또한 16에서 34세까지의 인구를 보면 함북 40.7%, 함남 36.3%, 평남 35.3%, 경기 35.2%로 전국평균 31.8%보다 역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남 27.1%, 충북 27.9%, 충남 28.3%, 경북 28.4%, 전북 28.4를 차지하여 역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평북, 황해가 약간 높고, 강원이 비슷하며, 경남은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적 차이를 다음 <표 10>과 비교해 보자.

〈표 10〉 1940년 도별 전출·전입 인구 상황

(단위: 명)

	전입	전출	전입-전출
경기	319,523	129,557	189,966
충북	51,987	138,116	-86,127
충남	60,003	163,065	-103,062
전북	47,568	131,217	-83,649
전남	47,437	116,941	-69,504
경북	58,342	197,968	-139,626
경남	85,283	94,918	-9,635
황해	81,331	115,991	-34,660
평남	140,485	107,664	32,821
평북	65,648	73,324	-10,676
강원	157,958	119,541	38,417
함남	159,677	125,578	34,099
함북	258,921	17,185	241,636
합계	1,531,065	1,531,065	0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0)

<표 10>을 보면 앞에서 젊은 층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았던 함북의 전입초과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았던 함남의 경우를 보면 전입초과인구는 3만여명에 불과하지만, 함북으로의 전출초과 인구 77,881명을 제외하면 전입초과인구가 11만여명에 달해 도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치이다. 평남과 경기도 전입인구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젊은 층에 있어서 낮은 수치를 보였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도두 큰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전출, 전입된 인구를 연령적으로 봤을 때,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총독부가 1934년 1월 1일부터 1944년 1월 1일까지 농촌 5개 촌락 980호의 인구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의 자료를 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표 11>에서 보면 젊은 층은 상당수가 조사지역을 떠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에서 30세까지의 남자는 50%이상이 농촌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6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도 벌써 23% 정도가 구직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에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 비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 구직남자유출자 299명중에서 16-30세에 이르는 젊은 층이 219명을 차지하여 73%라는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표 11〉 16세이상 남자의 연령별 유출실태

	총남자수 (명)	구직유출자(명)	유출비율 (%)
16-20	238	55	23.1
21-25	159	84	52.9
26-30	155	79	51.0
31-35	148	26	17.6
36-40	130	23	17.7
41-45	92	17	18.5
46-50	130	8	6.2
51이상	393	7	1.8
합계	1445	299	20.7

출전:<農村人口移動調査報告>,
殖産銀行調査月報, 15권 10호, 1944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930년대 중반 이후 도시화, 공업화는 연령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이 많은 층이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반면 젊은 연령층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농업중심의 생활양식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변의 새로운 환경에 연령이 많은 층보다 젊은 층이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여진다.

3) 이동인구와 학력의 관계

1919년의 삼일 독립운동이 좌절된 이후 도시 지역에서는 한국인의 교육열이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韓祐熙는 1920년대 이러한 교육열의 확대를 '실력양성론의 확대전파, 학교의 선발배치기능과 지위획득 요구, 교육을 관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교육관'으로 설명하고 있다(韓祐熙, 1991).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한국인의 교육열은 계속 확대되어 농촌지역으로까지 파급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인의 교육열이 도시지역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에 오면 농촌지역에까지 확대되었을까? 또 총독부가 교육을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을까? 한국인의 교육열이 확대 전파된 이유중에 1920년대부터 식민지체제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사회적 분위기와 1930년대 도시로부터 시작된 공업화, 도시화에 대한 한국인의 적극적인 인식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식민지체제 아래에서 더 나은 경제적, 문화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공업화, 도시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1944년 15세이상 조선인 남자의 도별 학력 상황

(단위: 명)

	전문졸 이상	중등졸	초등졸	초등 중퇴	불취학	합계
경기도	10,639	44,050	182,005	108,122	451,011	795,27
	(1.3)	(5.5)	(22.9)	(13.6)	(56.7)	(100.0)
충청북도	387	4,002	29,047	20,460	197,190	251,086
	(0.2)	(1.6)	(11.6)	(8.1)	(78.5)	(100.0)
충청남도	678	6,931	53,118	43,319	308,015	412,061
	(0.2)	(1.7)	(12.9)	(10.5)	(74.7)	(100.0)
전라북도	833	7275	49,062	49,820	308,485	415,475
	(0.2)	(1.8)	(11.8)	(12.0)	(74.2)	(100.0)
전라남도	1,249	10780	84,790	108,736	471,745	677,300
	(0.2)	(1.6)	(12.5)	(16.1)	(69.6)	(100.0)
경상북도	1,233	10458	76,903	61,094	497,150	646,838
	(0.2)	(1.6)	(11.9)	(9.4)	(76.9)	(100.0)
경상남도	1396	13708	89,911	66,891	437,177	609,083
	(0.2)	(2.3)	(14.8)	(11.0)	(71.8)	(100.0)
황해도	1,505	9794	73,905	70,351	373,927	528,882
	(0.3)	(1.9)	(13.9)	(13.3)	(70.7)	(100.0)
평안남도	2,563	13694	96,562	102,057	270,732	485,608
	(0.5)	(2.8)	(19.9)	(21.0)	(55.8)	(100.0)
평안북도	1,423	10098	49,952	124,749	284,381	490,603
	(0.3)	(2.1)	(14.3)	(25.4)	(58.0)	(100.0)
강원도	823	6643	59,865	63,124	382,048	511,639
	(0.2)	(1.3)	(11.5)	(12.3)	(74.7)	(100.0)
함경남도	2,018	14022	97,273	101,089	332961	547,371
	(0.4)	(2.6)	(17.8)	(18.4)	(60.8)	(100.0)
함경북도	1,052	10007	73,976	44,080	186,143	315,258
	(0.3)	(3.2)	(23.5)	(14.0)	(59.0)	(100.0)
합계	25,772	161462	1,034,869	963,892	4,501,009	6,687,004
	(0.4)	(2.4)	(15.5)	(14.4)	(67.3)	(100.0)

출전: 朝鮮國稅調査報告(1944)

따라서 한국인이 삼일 독립운동이 좌절된 이후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일본어 위주의 근대식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며, 193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속에서 농촌지역에서까지 교육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학력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도농간의 학력에 대한 통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도별 학력상황의 분포를 중심으로 이동인구와 학력과의 관계를 유추해 본다.

<표12>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상자를 중심으로 보면 경기도가 29.7%, 함경북도가 27.0%로서 전국 평균 18.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평안남도가 23.2%, 함경남도가 20.8%로서 전국 평균 18.3%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강원도가 13.0%, 충청북도가 13.4%, 경상북도가 13.7%, 전라북도가 13.9%, 전라남도가 14.5%로 전국 평균 18.3%보다 큰 차이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황해도 16.1%, 평안북도 16.7%, 경상남도 17.3%로서 약간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표 13>과 비교해보자.

<표 13>은 1925년에서 1941년까지 각 도의 졸업생수와 1944년 당시의 18세이상 국졸이상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양 지표의 도별 비율을 보면 앞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25년에서 1941년까지 졸업한 수의 비율에 1944년 현재 국졸이상자수의 비율을 비교하면 1944년 국졸이상자수의 비율이 경기도가 7.2% 더 높고, 함경북도가 2.7%, 평안남도가 2.0%, 함경남도가 1.5%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상북도가 3.6%, 경남 2.4%, 전남 2.2%, 전북 2.0%, 충남 1.5%, 충북 1.1%, 평남 1.0%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 황해와 강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결국 경기도와 함경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국졸 이상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입해 온 인구중 국졸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국졸자 비율이 낮은 것은 전출한 인구중 국졸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의 국졸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원래 졸업생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전입, 전출을 표시한 <표 10>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상자가 가장 높은 경기

〈표 13〉 도별 졸업생 비율(1925-1941)과 1944년 18세이상 국졸자 비율

(단위: 명)

	1925-1941 (1)	비율 (%)	1944 (2)	비율 (%)	(1)의 비율일 경우의 (2)의 수 (3)	(2)-(3)
경기도	186,128	13.2	257,990	20.7	164,707	93283
충청북도	52,840	3.8	33,373	2.7	46,759	-13386
충청남도	89,376	6.3	60,038	4.8	79,090	-19052
전라북도	91,331	6.5	56,179	4.5	80,820	-24641
전라남도	138,557	9.8	950,862	7.6	122,611	-27525
경상북도	149,752	10.6	971,904	7.0	132,518	-45328
경상남도	151,627	10.8	105,193	8.4	134,177	-28984
황해도	98,108	7.0	846,094	6.8	86,817	-2208
평안남도	101,196	7.2	115,148	9.2	89,550	25598
평안북도	110,610	7.9	857,787	6.9	97,880	-12102
강원도	73,812	5.2	67,259	5.4	65,327	1942
함경남도	106,255	7.5	111,946	9.0	94,027	17919
함경북도	58,787	4.2	865,065	6.9	52,021	34485
합계	1,408,379	100.0	1,246,295	100.0	1,246,295	0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5-1941); 朝鮮國稅調査報告(1944)

주: '비율'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도와 함경북도가 가장 많은 전입초과를 기록하고 있는 도이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도 상당한 전입초과를 나타내는 도이다. 반면에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큰 전출초과를 나타내는 도이다. 황해도, 평안북도, 경상남도는 전출초과를 나타내는 도이기는 하지만, 그 절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들이었다. 따라서 전출, 전입된 인구가 이동하지 않은 인구에 비해 학력을 가진 자의 비율이 높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며, 이것이 도별 국졸이상자수의 비율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총독부가 1934년 1월 1일부터 1944년 1월 1일까지 농촌 5개 촌락 980호의 인구변동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와 비교해 보자.

〈표 14〉 16세 이상 남자의 학력별 유출실태

	남자수 (명)	구직유출자 (명)	유출비율 (%)
불취학	1,163 (82.0)	185 (61.9)	15.9
국중퇴	32 (2.2)	16 (4.3)	40.6
국졸이상	224 (15.8)	96 (33.8)	45.1
합계	1,419 (100.0)	299 (100.0)	21.1

출전: 殖産銀行調査月報 15권 10호,1944

<표 14>를 보면 유출인구의 30%이상이 국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유출되지 않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국졸이상자의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각 도별 학력상황의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만든 요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불취학자보다는 국졸이상자의 유출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불취학자는 전체인구중 15.9%만이 유출하였거나, 유출한 경험이 있음에 반해 국졸이상자는 45.1%, 국민하교 중퇴자는 40.6%가 유출하였거나 유출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다.

종합해 보면, 이동인구와 학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동하지 않은 인구보다는 이동한 인구의 유학력자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의 도시화, 공업화에 농촌주민들이 적응하는 데 학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학력이 낮은 자보다는 학력이 높은 자의 적응능력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자는 높은 학력을 이용하여 도시화, 공업화에 대해 학력이 낮은 자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었다.

4) 이동인구와 계층과의 관계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몰락한 농민들의 離村현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 말기의 離村현상은 몰락한 하층 농민들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의 공업화, 도시화는 농촌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전 계층에서 離村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印貞植은 이러한 상황을 '농민의 離村은 단순히 빈농이나 日雇, 年雇와 같은 농업노동자의 전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安定農家로부터도 다수의 청소년이 공장등지로 이촌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安定農家를 불안정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더 위험한 일이다.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조선의 농촌에서는 안정농가의 자제가 공장노동에 적합한 국민학교 출신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처럼 중견층의 이촌을 정책적으로 억제하기가 불가능하다.'(印貞植, 1943, 195쪽)라고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한국 교육의 현실상 농촌에서 높은 학력을 보유한 자들은 대부분 계층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가정의 자제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촌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몰락한 하층 농민들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높은 층에서도 상당한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만한 전국적인 통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5개 촌락 98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자.

<표 15>를 보면, 구직유출자 중에서 1町미만

〈표 15〉 남자 구직 유출자와 경영 규모와의 관계

	0.5町미만	0.5정 -1町미만	1정- 2町미만	2町- 3町미만	3町이상	합계
인원(명)	63	78	83	17	7	248
비율(%)	25.4	31.4	33.5	6.9	2.8	100.0
농가호수(명)	179	288	254	79	26	826
비율(%)	21.6	34.8	30.7	9.5	4.4	100.0

출전: 殖産銀行調査月報 15권 10호, 1944
주: 1町은 3,000평

을 경작하던 자가 56.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町이상을 경작하던 자가 43.2%를 차지하여 결코 下層에서만 구직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中上層 농가에서도 상당한 인구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농가경제의 수지상태와 남자구직유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음의 표를 보도록 하자.

<표 16>을 보면 구직유출자 중에서 수입초과를 나타내는 上層농가출신이 115명, 지출초과를 나타내는 하층농가출신이 89명으로서 오히려 수입초과를 나타내는 상층농가에서 더 많은 구직유출자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구직유출이 농가경제의 몰락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농가 경제의 수지 상태와 남자 구직 유출자의 관계

	상	중	하	합계
인원(명)	115	59	89	263
비율(%)	44	22	34	100

출전: 殖産銀行調査月報 15권 10호, 1944
주: 상-수입초과, 중-균형, 하-지출초과
수입은 1943년의 농업을 비롯한 모든 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결국 1930년대 중반 이후의 離村현상은 농촌의 압출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흡입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공업화, 도시화가 몰락한 하층 빈민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기존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4.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의 직업 전환

1930년대의 공업화, 도시화가 과연 농촌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지 도시지역으로의 離村현상에 대해서만 분석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離村현상이 질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락 또는 정체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아보아야 당시 농촌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離村이 다른 비농업부문의 증가와 어떻게 연관되어 나타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업 부문으로부터 비농업 부문으로의 직업 전환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인 직업별 호수의 변화

1930년대 이후 도시화, 공업화는 우선 농촌주민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공업화에 의한 비농업부문의 확대는 1930년대 중반 이전보다 직업의 전환을 훨씬 수월하게 했을 것이다. 우선 직업별호수의 변화경향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자.

<표 17>을 보면 1926년부터 비농업 호수가 농업 호수보다 많은 수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38년에서 1942년 사이에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쳐 비농업 부문을 확대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1938년 이전까지 비농업 호수의 증가를 주도한 其他有業者뿐만 아니라, 1938년 이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어업 및 제염업, 공업,

〈표 17〉 전국 한국인 직업별 호수의 변화 경향(1926-1942)

(단위: 戶)

	농림및목축업	어업및제염업	공업	상업및교통업	공무자유업	其他有業者	비농업유업자 합계
1926	2,835,042	51,979	101,089	283,070	132,118	152,006	668,2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30	289,2267	62,939	109,057	298,381	158,622	222,181	788,241
	(102)	(121)	(108)	(105)	(120)	(146)	(118)
1934	2,906,314	57,961	123,579	344,874	192,032	306,608	946,634
	(103)	(112)	(122)	(115)	(145)	(202)	(142)
1938	2,960,174	65,113	145,748	377,896	199,870	354,897	1,078,393
	(104)	(125)	(144)	(133)	(151)	(233)	(161)
1942	2,986,644	94,994	253,218	428,335	268,448	488,294	1,438,292
	(105)	(183)	(250)	(151)	(203)	(321)	(215)
1930-1926	57,225	10,969	7,968	15,311	26,504	70,175	119,958
1934-1930	14,047	-4,978	14,522	26,034	33,410	84,427	158,393
1938-1934	53,860	7,152	36,691	53,481	7,838	48,289	131,759
1942-1938	26,670	29,881	107,470	50,439	68,578	133,397	359,899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6-1942)

상업 및 교통업, 公務自由業 등에 있어서도 큰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부터 농촌주민들의 직업 전환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각 직업의 계승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민들중 많은 수가 직업을 전환하거나, 새롭게 직업을 구해야 하는 젊은 농촌출신들 중에서 농업보다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인 직업별 남자 主業者수의 변화

이러한 경향은 직업별 남자 주업자수의 변화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표 18>을 보면 농업 및 목축업 남자유업자수는 계속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농업호수가 적은 수로나마 계속 증가했던 것보다 당시의 변화상황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농민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던 젊은 층의 상당수가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농업 남자유업자수의 변화경향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된다. <표 18>을 보면 비농업 남자유업자수는 기간별 증가수에 있어서 계속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34년부터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1938년에서 1942년 사이에는 그 이전 12년 동안에 증가한 총수보다도 더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호수의 변화에 있어서 1934년에서 1938년 사이의 증가호수가 1930년에서 1934년 사이에 증가한 호수보다 적었던 반면에 이 기간의 남자 주업자수는 반대였다. 남자 주업자수의 변화에서는 이미 1934년부터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직업별 호수의 변화 경향에서는 1934년에서 1938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한 호수가 其他有業 호수였던 반면에 남자 주업자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공업 및 광업 남자 주업자수의 증가가 가장 컸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직업별 호수의 변화 경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농촌주민들에게 있어서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직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3) 직업 전환과 연령과의 관계

그러면 연령별로는 이러한 직업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표 19>를 보면 직업별

〈표 18〉 전국 한국인 직업별 남자 주업자수의 변화(1926-1942)

	농업 및 목축업	어업 및 제염업	공업 및 광업	상업 및 교통업	공무자유업	기타유어업	비농업유어업자 합계
1926	4,435,320	67,354	100,561	275,244	100,147	166,640	710,1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30	4,373,868	74,918	106,974	296,414	117,496	232,466	828,268
	(98.6)	(111.2)	(106.3)	(107.7)	(117.3)	(139.5)	(116.6)
1934	4,231,237	73,503	122,315	300,438	137,747	322,674	956,677
	(95.4)	(109.1)	(121.6)	(109.2)	(137.5)	(193.6)	(134.7)
1938	4,157,556	81,099	218,291	359,553	141,478	377,054	1,177,475
	(93.7)	(120.4)	(217.1)	(130.6)	(141.3)	(226.2)	(165.8)
1942	4,032,180	118,570	415,500	426,334	208,291	532,011	1,700,706
	(90.9)	(176.0)	(413.2)	(154.9)	(208.0)	(319.3)	(239.5)
1930-1926	-61,452	7,564	6,413	21,170	11,749	65,826	118,142
1934-1930	-142,631	-1,415	15,341	4,024	20,251	90,208	128,409
1938-1934	-73,681	7,596	95,976	59,115	3,731	54,380	220,798
1942-1938	-125,376	37,471	197,209	66,781	66,813	154,957	523,231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6-1942)

단위: 명

로 연령구조가 상이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식민지공업화의 결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공업의 연령구조를 보면, 15세에서 24세까지의 인구가 40.6%를 차지하고 25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가 30.7%를 차지하여 이 두 부분을 합하면 71.3%에 이르러 합계 평균 56.9%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30년대에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중장년층으로부터의 직업 전환을 통한 유입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새롭게 직업을 구해야 하는 젊은 층으로부터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광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가사업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광업은 15세에서 34세까지가 전체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업은 74.1%, 공무자유업은 70.8%, 가사업은 7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부분에 있어서도 중장년층의 농업으로부터의 직업 전환을 통한 유입보다는 새롭게 직업을 구해야 하는 젊은 층으로부터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30년대 후반기부터 공업, 광업, 교통업 등에 있어서의 남자 주업자수의 증가가 그 이전에 비농업 남자 주업자수의 증가를 주도하던 其他有業者보다 더 많게 되었다는 사실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직업을 전환하거나 새롭게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 수산업, 기타산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젊은 층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5에서 34세까지의 합계 평균이 56.9%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산업은 60.3%로 약간 높고, 상업은 56%로 거의 비슷하며, 기타산업은 51.0%로 약간 적다. 이 부문에서는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장년층으로부터의 직업 전환과 새롭게 직업을 구해야 하는 젊은 층으로부터의 유입이 비슷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其他有業者에 있어서 1930년 이후 증가한 수가 기존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미 농업에 종하고 있던 농촌주민들로부터의 직업의 전환을 통한 유입이 많았던 직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공업화, 도시화가 농촌주민들에게 있어서 연령적으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공업, 광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가사업에서 연령 자체가 어떤 장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들 중 이미 기존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中·長年層은 연령 자체가 장벽요인으로

〈표 19〉 1940년 전국 생산 연령별 유업자 분포

(단위: 명)

	15-24	25-34	35-44	45-59	합계
농업	1,719,212	1,534,449	1,279,491	1,418,746	5,951,898
	(28.9)	(25.8)	(21.5)	(23.8)	(100.0)
수산업	37,338	40,605	29,810	21,460	129,213
	(28.9)	(31.4)	(23.1)	(16.6)	(100.0)
광업	57,982	55,806	34,137	21,292	169,217
	(34.2)	(33.0)	(20.2)	(12.6)	(100.0)
공업	188,076	142,064	80,535	52,460	463,135
	(40.6)	(30.7)	(17.4)	(11.3)	(100.0)
상업	157,364	154,092	129,064	115,688	556,208
	(28.3)	(27.7)	(23.2)	(20.8)	(100.0)
교통업	61,636	47,620	24,840	13,379	147,477
	(41.8)	(32.3)	(16.8)	(9.1)	(100.0)
공무자유업	75,370	86,741	43,056	23,659	228,836
	(32.9)	(37.9)	(18.8)	(10.4)	(100.0)
가사업	60,493	12,733	8,787	12,701	82,943
	(63.9)	(13.4)	(9.3)	(13.4)	(100.0)
기타산업	113,374	142,384	124,143	120,951	500,855
	(22.6)	(28.4)	(24.8)	(24.2)	(100.0)
합계	2,470,845	2,217,479	1,753,863	1,800,336	8,241,553
	(30.0)	(26.9)	(21.3)	(21.8)	(100.0)

출전: 朝鮮國稅調査報告(1940)

작용하지 않는 기타산업, 수산업, 상업 등 한정된 직업으로만 직업 전환을 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새롭게 직업을 구해야 했던 젊은 층은 모든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연령이 많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離村인구 중에서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4) 직업 전환과 학력과의 관계

1930년대의 공업화, 도시화에 의해 창출된 직업들은 이전과는 달리 일정한 학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새롭게 한국인 노동력의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으며, 正久宏至가 '戰時下 朝鮮의 勞動問題'를 '그 適應性을 中心으로' 살펴보게 만들었다(正久宏至,1941). 따라서 농촌주민들이 직업을 전환하거나 새롭게 직업을 구해야 할 때 연령뿐만 아니라 학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의 印貞植의 언급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安定農家의 자제가 공장노동에 적합한 국민학교 출신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처럼 중견층의 離村을 정책적으로 억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직업을 구할 때 학력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求職과 學力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구직과 학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국적인 통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가 농촌 5개촌락 980호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다.

<표 20>을 보면 학력에 따라 구직유출자의 직업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순사, 면서기, 교원, 軍屬, 관리, 조합서기 등 공무자유업에 해당되는 직업에는 불취학이나 국민학교 중퇴자가 하나도 없고, 국졸 이상자만 있는

〈표 20〉 교육 정도별 구직 유출자의 직업

(단위: 명)

	불취학	국중퇴	국졸이상		불취학	국중퇴	국졸이상
순사			1	운전수			1
면서기			3	목수	3	2	5
교원			1	직공	20	5	21
군속			2	탄광부	31	1	3
관리			3	토목노동	69	5	15
회사원	1		14	年雇	18		4
조합서기			2	雇女	10		
점원			7	日傭	3		2
병원조수			1	酒業	4	1	3
토건업			1	농업	9	1	1
소매상	6			어부	1	1	
행상업	2			牛車夫	1		
정미업			1	未詳	19	1	10
여관업	1			합계	198	17	101

출전: 殖産銀行調査月報 15권10호, 1944

것을 보면 학력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회사원, 점원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중요한 변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학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직업들은 대부분 보수가 좋고,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비육체적인 노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불취학자는 탄광부, 토목노동, 年雇, 雇女, 소매상, 행상업, 농업 등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종은 육체적인 노동을 주로 하는 것이고, 학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직종보다 보수가 낮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직공은 불취학자나 국졸 이상자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탄광부나 토목노동, 年雇보다 학력이 높은 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면 이미 학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력이 높은 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직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종에 종사할 수 있었으므로 학력이 낮은 자보다 공업화,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더 높은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은 자는 학력이 낮은 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離村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학력이 낮은 자는 학력이라는 장벽에 의해 학력이 높은 자보다 취직하기가 더 어려웠으며, 취직한다고 할지라도 보수가 낮은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은 자보다 공업화, 도시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져 전체적인 이촌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전체 이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불취학자가 더 높았지만, 불취학자 총수중에서 離村한 비율과 국졸 이상자 총수중에서 離村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前者가 훨씬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령이 많은 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바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離村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Ⅲ. 결론

농촌주민들은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계속 몰락적 계층분해의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그들이 몰락적 계층분해를 계속 강요당했던 이유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이후에 강화된 지주소작관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는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어 몰락적 계층분해의 경향을 둔화시켰는데, 이것은 많은 농촌주민들이 離村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1930년대 이후의 도시화, 공업화는 일본독점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일본인이 중요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 비해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도농 격차의 심화, 도별 격차의 심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었다. 그 이전에도 도시지역으로의 離村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로 농촌지역의 압출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압출요인보다는 도시화, 공업화에 의한 도시지역의 흡입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업화, 도시화에 의해 비농업부분이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새롭게 직업을 구해야 하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기존에 농촌지역에서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농촌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러한 이촌현상은 단순히 최하층 농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농촌주민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는 모든 농촌주민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연령적으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업화, 도시화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고용기회의 상당부분이 젊은 층에게 유리했다. 따라서 이촌자 중에서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중장년층이 전혀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젊은 층에 비해 다양한 직업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其他有業, 상업, 수산업 등 한정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에따라 다양한 직업에 적응할 수 있었던 젊은 층보다 離村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연령 뿐만 아니라, 학력에 의해서도 차별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공업화, 도시화에 의해 창출된 직업중에서 일정한 학력적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이 상당한 비율을 점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의 식민지체제하에서는 일본어의 구사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층이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더 높은 離村 比率을 나타내게 되었다. 물론 총 이출자중에서는 당시의 현실 때문에 無學力者가 有學力者보다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학력자의 離村 비율보다는 유학력자의 이촌 비율이 훨씬 높았다.

〈참고문헌〉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1942,『土幕民の生活・衛生』

京城帝國大學聯盟法律學班, 1944, "南鮮一農村の實態調査報告",『朝鮮植産銀行調査月報 15-4』

姜萬吉, 1986, "日帝時代의 都市貧民生活",『韓國史硏究 53集』

姜薰德, 1984, "日帝下 國內小作爭議와 海外移住農民",『韓國史硏究 45集』. 韓國史硏究會

孔提郁, 1992, "1950년대 韓國 資本家의 形成過程",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경일, 1986, "일제하 도시빈민층의 형성",『한국사회사연구논문집 3집』, 한국사회사연구회

金文植外 1982,,『日帝의 經濟侵奪史』, 玄音社

金哲 1965,『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東亞日報社 1940.1-1940.6『東亞日報』

문소정, 1990, "1920-1930년대 소작농가 자녀들의 생활과 교육"『한국사회사연구논문 20집』, 한국사회사연구회

寺山時二 昭和10年,『朝鮮所得稅令精義』, 朝鮮財務協會

徐賢珠, 1991, "1920년대 渡日朝鮮人 勞動者階級의 形成",『韓國學報 63集』

小田忠夫 1938, "朝鮮に於ける都市財政の性格"

孫禎睦, 1985, "日帝强占初期(1911-1920년)의 都市人口數",『韓國史硏究 49集』, 韓國史硏究會

孫禎睦 1990, "日帝下化學工業都市 興南에 관한 硏究(上)",『韓國學報 59集』

孫禎睦 1990, "日帝下化學工業都市 興南에 관한 硏究(下)",『韓國學報 60集』

水原市史編纂委員會, 1986,『水原市史』

愼鏞廈, 1987,『韓國近代社會史硏究』, 一志社

安秉直 譯, 中村哲 著 1992,『世界資本主義와 移行의 理論-東아시아를 중심으로』, 比峰出版社
安秉直,中村哲 共編著, 1993,『近代朝鮮 工業化의 硏究』, 一潮閣
安秉直外 編, 1990,『近代朝鮮의 經濟構造』, 比峰出版社
吳成哲, 1991, "1930年代 初等敎育 擴大와 朝鮮人의 敎育要求",『敎育理論』 제6권 제1호,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敎育學科
이광호, 1991, "한국교육체제 재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45-1955년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이해영 · 권태환 1978,『韓國社會 人口와 發展』, 서울大學校社會科學大學 人口 및 發展問題硏究所
李喜演 1987,『人口地理學』, 法文社
印貞植 昭和18,『朝鮮農村再編成の硏究』, 人文社
林元澤 外 1990,『韓國經濟의 理解』, 比峰出版社
正久宏至 1941, "朝鮮に於ける勞動力の量的考察",『朝鮮植産銀行調査月報 32』
正久宏至 1941, "조선に於ける農民離村",『朝鮮植産銀行調査月報 34』
正久宏至 1941, "戰時下朝鮮の勞動問題(上,下)"『朝鮮植産銀行調査月報 37,38』
趙璣濬 1982,『日帝下의 民族生活史』, 玄音社
鄭德基 "日帝의 韓國農村 收奪史 硏究-1940年代 農産物 供出制度를 中心으로-"『慶熙史學 14集』
鄭德基,崔槿默, 1979, "日帝植民地時代의 社會經濟史 硏究-農民과 勞動者의 生活史를 中心으로-",『湖西史學 7集』
鄭然泰, 1994, "日帝의 韓國農地政策"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鄭然泰, 1992, "1940년대 前半 日帝의 韓國農業 再編策-'農業再編成政策'을 중심으로-",『國史館論叢 38集』
朝鮮總督府, 1925,1930,1935,1940,1944『朝鮮國稅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5-1942,『朝鮮總督府統計年譜』
朝鮮總督府, 1932,1936,1940『朝鮮總督府統計要覽』
朝鮮總督府官房調査課, 1944, "農村人口移動調査報告",『朝鮮總督府調査月報 15-12』
朝鮮總督府農林局農政課, 昭和17,『朝鮮の農業』
주익종, 1994, "일제하 평양의 메리야스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崔吉城 編著, 1992,『日帝時代 한 漁村의 文化變容』(下), 아세아문화사
崔在錫, 1988,『韓國農村社會變動硏究』, 一志社
한국교육사연구회, 1982,『한국교육사연구의 새방향-교육사학의 본질과 방법』, 집문당
韓祐熙, 1991, "普通學校에 대한 抵抗과 敎育熱",『敎育理論』 제6권 제1호,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敎育學科
함한희, 1992, "朝鮮末, 日帝時代 宮三面農民의 社會經濟的 地位와 그 變化",『韓國學報 제66集』
華城郡史編纂委員會, 1990,『華城郡史』

Rural dwellers' adaptation process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30-45

Ki-Bong Lee*

This study analyzed what impacts the rapid urbanization and colonial industrialization since 1930 in Korea have had on rural dwellers and how they have adapted to these processes.

The study has been advanced to detect the national changes in the whole Korean society i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ir concrete adaptation process, on the basis of in depth interviews with the inhabitants who have still been in existence in the case region of Bibong-Myon, Hwaseong-Gun, K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provinces and the urban and rural communities were caused by the rapid colonial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30s, and gradually increasing exploitation by Japan and tenant farming system made rural communities extremely impoverished. As a result, a lot of rural inhabitants moved to urban communities, which led to an increasing expansion of urban population

2. The population efflux from rural communities occurred not only in the ruined group of rural communities but also in the whole groups, because it was associated with both the push factor resulting from absolute poverty in rural communities and pull factor in urban ones. Especially, the efflux rate of the young and high-educated groups was higher than any other group.

3. According to the case study, the involuntary rural exodus took place in the low-educated group, mostly associated with economic poverty and draft, whereas the voluntary one occurred in the high-educated group, based on its higher education and its relatives in urban communities.

4. The changes in rural communities i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ok place due to both the push factor resulting from absolute poverty in rural communities and powerful pull factor in urban ones, compared with those in the early and middl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transitional period-like feature was characteristic of them, compared with those in the 1960s, under observations that the rate of the group which returned to rural communities out of the groups which moved to urban ones was higher, its return was usually stemmed from insecurity of living and some family's secret reasons, and its turn-over rate was higher after it moved to urban communities.

Keywords: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Rural dwellers, Adaptation process, Push factor, Pull factor, Transitional period-like feature

---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